

# 미중경제관계: GDP 역전, 상호의존, 제도경쟁

---

손 열  
연세대학교

2017년 8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7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미중경제관계: GDP 역전, 상호의존, 제도경쟁”  
ISBN 979-11-87558-86-6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미중경제관계: GDP 역전, 상호의존, 제도경쟁

손 열

연세대학교

## I. 들어가며

미중 경쟁을 비유하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은 기성세력과 신흥세력 간 세력배분의 변화가 군사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으로서 이 논리의 기저에는 경제의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이 자리하고 있다. 케네디(Kennedy 1988)는 기술진보에 따른 경제력 성장과 군사력 변화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가 간 차별적 경제성장이 군사력 배분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국제적 갈등과 전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길핀(Gilpin 1983) 역시 불균등 성장을 통해 부상하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성 정치·경제질서를 수정, 재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세력전이이론은 이를 구체화하여 국가 간 성장률의 격차가 완만하거나 비례적일 경우 상대적 권력이동은 적을 것이고 따라서 분쟁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반면, 성장률의 가파른 차이로 불균등 성장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Organski and Kugler 1980). 이들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지도력이 도전 받는 가운데, 양국이 각축을 벌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는 양자간 경제적 격차 변화의 속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격차가 역전되거나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중국은 기성 질서의 정당성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가하면서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나, 반대로 역전이 완만하게 전개될 경우 양국 간 상호 적응과 진화의 여지가 주어질 것이다.

한편, 양국관계에서 경제적 격차라는 구조변수(structural variable)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정변수(process variable), 즉 양국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의 흐름이다. 경제의 세계는 단위 간 스톡/저량(stock)의 규모 변화뿐만 아니라 유량(flow)의 측면이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 간 경제적 연계 및 상호의존의 정도에 따라 국가 간 관계의 양상이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 예컨대 자유주의 이론이 보여주듯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무역, 투자, 금융, 인적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정학적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복합적 상호의존의 대칭성이 관건이다. 코헤인과 나이(Keohane and Nye 1977)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동학이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며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유주의

자가 상정하듯이 반드시 협력(cooperation)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한 국가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국가에 비해 상호교역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교역관계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때 초래되는 비용이 더욱 클 것이므로 교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협상력을 증대시킨다. 허쉬만(Hirschman 1945)은 《국력과 대외무역의 구조》(*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에서 국가 간 비대칭적 상호의존구조가 약자(즉, 거래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높은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강자(즉, 거래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이 낮은 국가)의 선호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 경제관계의 상호의존도가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또한 대칭적이라면 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비대칭성이 높다면 이에 대한 양국 간 현실주의적 대응의 동학이 전개될 것이다.

끝으로 경제력의 변화 혹은 경제적 상호의존 양상의 변화가 군사적 경쟁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탈정당화(delegitimation) 국면으로 나타난다. 길핀에 따르면, 이 국면은 실제 권력(actual power)과 위신(prestige)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등장한다. 경제적 부상에 따라 도전국은 기성 패권국이 주도한 제도와 질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를 건축하고 유지 보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위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신의 확보를 위해 기성권위와 질서에 대한 탈정당화(delegitimation) 공세를 전개한다는 것이다(Gilpin 1983; Lebow 2015). 러기(Ruggie 1982)의 표현대로 권력(물리적 권력)은 질서의 '형태'(form)를 형성할 수 있지만 질서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전국은 상승하는 권력적 지위에 걸맞는 위신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을 담은 '컨텐츠'를 제시하고자 하고, 기성대국은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기성 규범과 제도, 질서를 미세조정, 업그레이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모델스키(Modelski 1978)에 의하면 탈정당화 국면 이후 기성 연합의 분산과 신흥 연합의 결성이란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본다. 여기서 연합 결성의 성공 여부는 자국이 제시하는 제도/질서의 정당성을 여러 주변국들로부터 이끌어 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Goh 2013).

경제의 세계에서 정당한 사회적 목적을 담은 질서의 컨텐츠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45년 전후 서구질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탱하는 자유무역과 동시에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적 가치를 담지하는 국가의 개입을 일정하게 용인하는 이른바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정당성을 획득하였고, 1980년대 들면서 신자유주의 혁명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 정부, 탈규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이 세계를 풍미하며 신질서를 건축한 바 있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경제적 경쟁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태 지역의 경제질서 건축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각축이란 측면에서 플랫폼 경쟁 혹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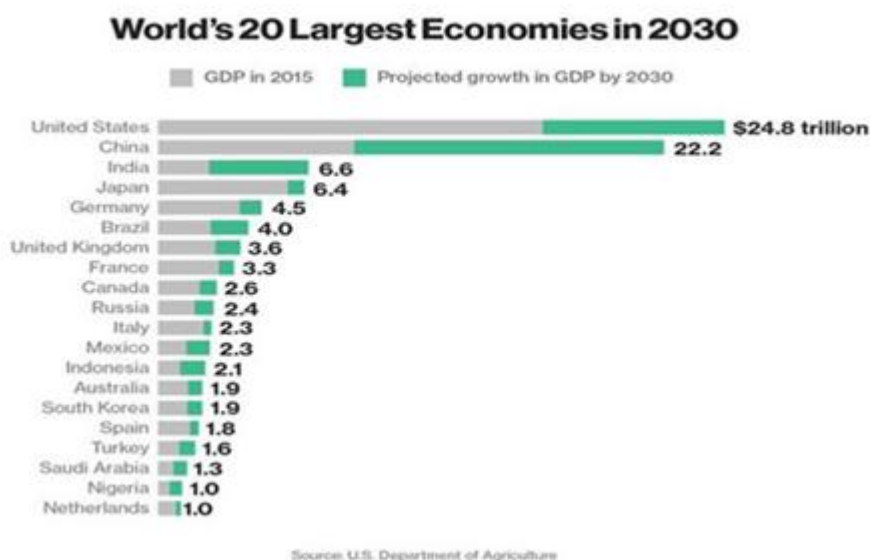
이 글은 미중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변화가 전략적 경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양국 간 경제적 변화의 전략적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첫째, 양국 GDP의 상대적 격차와 그 속도 전망, 둘째,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복합적 양상, 셋째, 경제 아키텍처를 둘러싼 양국 간 정당성/규범 경쟁이란 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GDP 격차의 역전 시점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30년대 이후에야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고, 둘째, 격차의 역전에도 불구하고 무역, 투자, 금융면에서 양국 간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는 심화될 것이어서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끝으로 양국 간 경제제도/질서 건축을 통한 정당성 경쟁에서 중국은 가까운 장래 미국과 맞대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030년 시점을 기준으로 양국 간 경제관계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미중 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II. 미중 GDP 변화 전망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주로 경제력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G2까지 끌어 올린 것처럼 향후 중국이 지역패권 혹은 지역질서 건축의 주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핵심 요소 역시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으나 아시아(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때 여러 부작용을 목도해왔다. 미국과 대항할 만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까닭이다. 중국은 적어도 경제력이 미국을 본격적으로 상회하기 전까지는 군사력에 기반한 직접적 도전이 아닌 경제적 유인의 확대로 역내 지도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본격적인 안보딜레마의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림 1] 2030년 세계 20대 경제대국 (단위: 조 달러)



출처: U.S. Department of Agriculture(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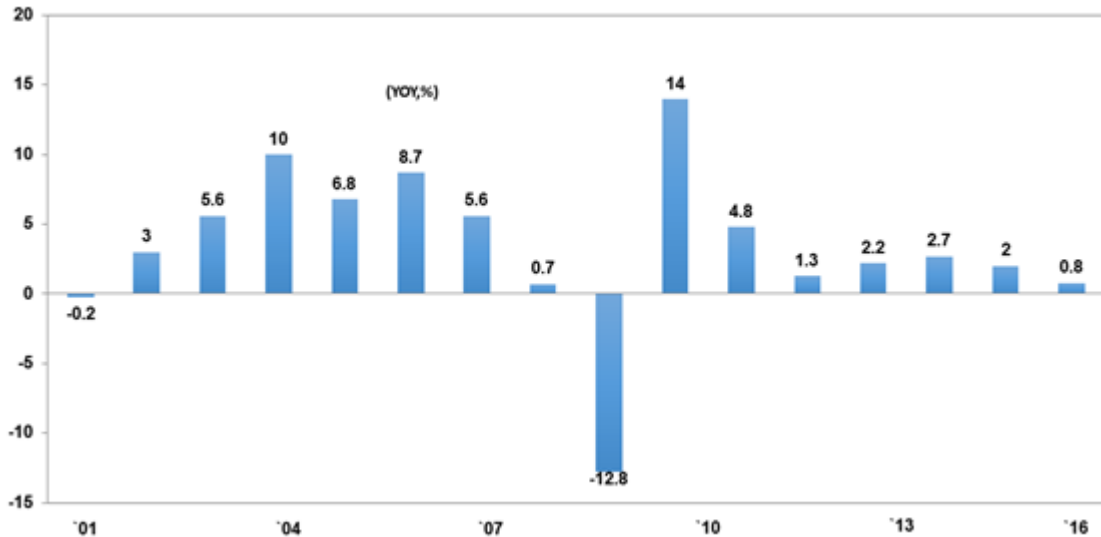
그렇다면 미중 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역전 시기는 언제일까. 2010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중국이 7.5% 성장, 미국이 2.5% 성장세를 지속하고, 위안화가 연 3% 정도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될 경우 2019년 미중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2014년에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골드만 삭스는 2027년에 역전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2015년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2030년 전망을 내어 놓았는데, 미국이 24.8조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지키는 반면 중국은 22.2조로 미국과의 차이를 좁히고 있으나 여전히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요컨대 시간이 지날수록 즉, 최근으로 올수록 미중 경제 역전 시점이 길어지고 있는데,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여진 속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2010년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정점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확산보다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감속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래리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소득격차 확대, 인구변화,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기술혁신 등 구조적 문제로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recession)에 접어들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경제권이었으나 이들 역시 저성장에 접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6.1%(1990년대) → 7.4%(2001-2007) → 6.5%(2008-2015) → 5.2%(2015-202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금융위기 이래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 및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global demand)도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다. 유로존은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채무축소(deleveraging) 과정을 겪고 있어 경기회복이 여의치 않은 상태인 반면 미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위기 이전 미국이 보여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보여준 구매력 수준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과거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수요감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세계 경제 교역량의 현저한 축소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교역량의 상대적 축소는 신흥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확장세 둔화,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 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무역을 통한 성장을 이룩해 온 중국 경제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뚜렷한 수출성장세의 둔화를 맞이하고 있다. 2001-2008년 29%의 기록적인 신장세를 보인 수출은 2014년 10% 이하로 추락하였고, 수출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50% 이하로 저하되고 서비스 부문의 신장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조적 원인을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Fang 2016). 2010년을 기점으로 노동인구(15-59세)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2,93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의존도(노동인구 혹은 경제활동인구에서 15세 이하와 65세이상의 인구 비율) 역시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도 인구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불균형의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은 하강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세계경제의 교역량 변화, 2001-2016 (전년 대비, 단위: %)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이렇듯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국 정부는 이른바 뉴노멀 즉, 성장률 저하, 정부투자 축소, 균형성장(양에서 질, 생산에서 소비, 도농격차 축소, 수출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하강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감속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상하이 주가지수(인덱스)가 40% 하락하고 거래량이 70%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로 접어들자 그 동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전면 부각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4조위안 규모의 경기자극책을 펴 막대한 인프라 투자에 나섰으나 동시에 그동안 약속한 개혁 패키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투입만 증가하여 재정적자와 과잉설비투자 부채증가를 가져와 금융불안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의 실물경제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III.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중국 경제 성장률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양국 간 경제력 역전의 시점을 늦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격차의 축소라는 구조적 추세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양국 간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 정도에 따

라 갈등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세력전이에 따른 패권갈등과 전쟁의 양상과 현재 미중 간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체의 출발점인 것이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상호의존은 상대국이 잘 하지 않으면 자국이 성공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미국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미래를 써 나가야 한다.”라며 화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과거 즉,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근거로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는 어떠한가.

첫째, 무역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985년부터 2014년 사이 무려 7,551% 증가한 5,900억 달러로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은 전체 교역 중 14% 정도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국의 대미 무역도 전체 교역의 14% 언저리에 놓여있다. 따라서 양국 간 무역에서 상호의존의 정도는 대칭적이고,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에서는 상대국과의 교역을 선호하는 이익집단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수출 최대 시장(20%)이고 그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중국 시장개방 및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 역시 강한 평화 이익(peace interest)을 가진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양국 무역의 추이를 보면 미국의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7%로 2000년 대비 5.5% 상승에 그친 반면,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로서 2000년 대비 12.4% 상승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양평섭 외 2016). 이와 함께 미국의 대중 무역역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그 규모는 1998년 570억 달러에서 2015년 3,66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마찰의 원천이 되고 있다(Ibid.). 이런 까닭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빼고 있다는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위안화와 달러화 사이의 환율 조정 등 다양한 대중 압박을 통해 역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중국의 경제적 성공 특히 중국의 대미수출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희석되고 제조업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여 집권할 수 있었고 이후 중국에 대해 다양한 무역압력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미중 간 수출입 통계는 양국 경제관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드러내어 주지 못한다. 예컨대, 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으로부터 어떤 상품이 수입되어 미국의 생산(따라서 고용)을 대체하는 지 알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부품을 중국으로 들여와 조립, 가공하여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사례 즉, 초국적 차원에서 생산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수출입 통계 수치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은 2008년 중국 수출품의 반 이상이 외자계 기업에 의한 제조품으로서 가공무역상품(processed trade goods)이고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는 90% 이상이라 보고 있다(Christensen 2015, 44).

사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세계 제2의 FDI 유치국으로서 2조 2,000억 달러,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는



3,300억 달러, 기타 투자 1조 달러로 이를 합치면 중국 GDP의 35% 상당하는 규모이며, 이 중 반 이상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2012년 미국의 대중 FDI는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하면 57%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이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 그리고 이들 역시 중국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미 투자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증가추세로 2007년도에 비해 무려 28배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120억 달러, 8만 명을 고용하는 무시 못할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대미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 국내 생산비용의 인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향후 이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투자에 있어서도 양국 간 비대칭성의 점진적 교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미중 간 금융의 상호의존 정도도 긴밀하다. 중국의 대외자산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로서 보수적 평가로도 약 1.6조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면 중국경제가 추락하는 이른바 '달러의 덫'(dollar trap) 위험을 안고 있다. 본래 미중 간 금융의 상호의존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중국은 대미 수출을 증대하면서 막대한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이 자국 국채를 매수, 보유하게 하여 부채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비정상적 상호의존 관계 즉, 미국의 소비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부채를 통해 수입을 소화하는 반면 중국이 미국의 과잉소비를 재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독자적으로 혹은 양자 협조 하에 재균형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해 왔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축소하고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는 상호 노력은 거대한 자본의 재분배와 실업을 감내하는 정치적 의지를 요하는 것이어서 그 전망은 밝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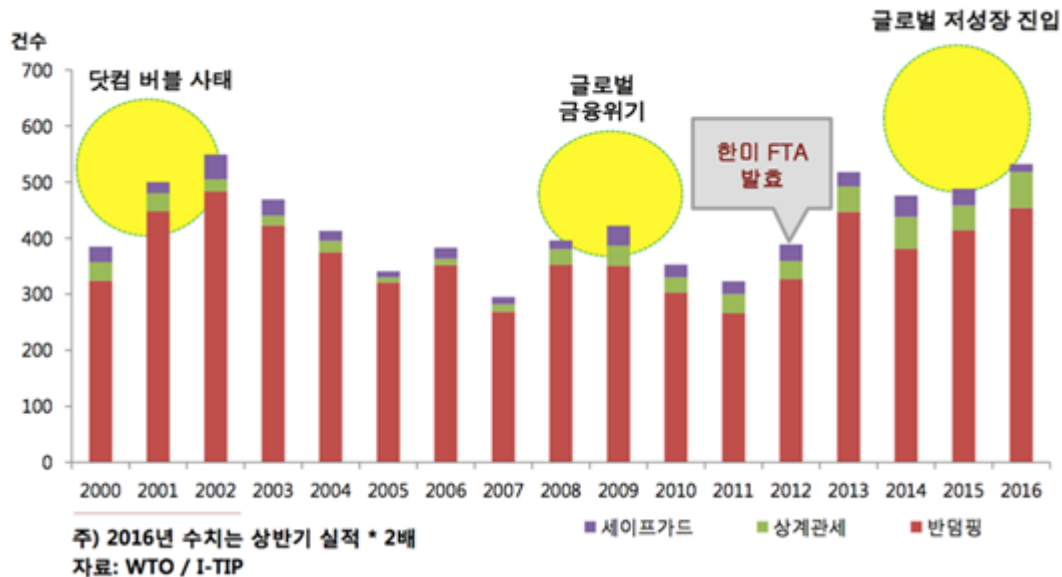
#### IV. 미중 플랫폼 경쟁

미중 양국은 지구 불균형(global imbalance) 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협조 노력보다는 서로 독자적 조치를 통해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국내소비 부양과 내수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과 투자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이 수요를 창출하여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수출을 흡수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며, 위안화 저평가 시정조치 요구, 중국 시장 내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정책이나 관행 시정 요구 등 다양한 양자조치를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승주 2015).

미중 양국은 상대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는 한편, 아태지역의 경제질서 건축의 주도권을 놓고도 본격적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주도권 장악 능력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국의 경제력 등 물질적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경제네트워크의 규칙과 규범, 플랫폼을 설계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즉, 지역 내 정당한 경제질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글로벌 보호주의 추이, 2000-2016.



출처: LG 경제연구원(2017)

이런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미국의 시도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다. 미국은 이를 “고수준의 포괄적인 21세기형 FTA”(high standard, comprehensive, 21st century FTA)라 부르며 아태무역정책의 표준, 아태경제질서의 플랫폼으로 삼아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21세기 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의 지위에 오른 중국은 2001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전격적으로 성사시키고 일본과 지역질서 주도권을 놓고 여러 영역에서 경쟁에 나섰던 반면, 미국은 2002년 테러 이후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중국에게 지역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미국은 중국에 의해 태평양이 가로막혀 아시아 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런 추세를 바꾸고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본격적 개입 전략으로서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e) 비전을 제시하고 그 주요 축으로서 TPP를 적극 추진한 것이다. TPP는 고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국경적 생산 네트워크 혹은 공급사슬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촉진하는 경제플랫폼으로 규정되었다. 오바마 정부가 TPP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한 2010-2011년이란 시점에서 TPP 협상국을 보면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경제 소국이어서 당장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지는 작았다. 또 뉴질랜드와 브루나이 이외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미 양자 FTA를 맺은 상태였다. 따라서 미국은 태평양의 남쪽을 연결하여 동남아까지 다다른 뒤 동북아(일본, 한국)로 확대하여 세를 결정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유인은 세계 최대인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access) 제공과 함께 이른바 ‘21세기 무역협정’

즉, 초국적 생산네트워크 혹은 공급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무역-투자-서비스 넥서스(nexus)의 제공이었다.

특정 플랫폼을 제시하고 개별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세력을 확산하는, 일종의 연합형성의 다자화 전략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는 단숨에 역내 최고의 무역협정의 지위에 올랐고, 중국은 일단 이를 미국주도 중국봉쇄전략으로 비판하면서 'anything-but-TPP' 전략을 펼쳐왔다(Yuan 2012). 중국의 경제적,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때 TPP 가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구조조정과 정책 자율성의 희생 혹은 타협이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편으로 TPP 가입을 위한 조건과 환경 정비를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2013년 5월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보도관을 통해 “중국은 평등호리(平等互利) 원칙에 입각하여 TPP 참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 및 가능성을 진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TPP 가입국과 참가 교섭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심은 TPP에서 자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자국중심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교섭을 주도하여 TPP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RCEP의 경우 아세안의 강한 중국 경계 의식을 불식시킨다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TPP 드라이브가 아세안을 분단시키고 있다는 아세안의 불만을 의식하면서 RCEP에서 아세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서히 자국의 발언권을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승주 2013).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을 횡단하는 보다 큰 아키텍처 설계를 암중모색하고 있다. 2014년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FTA(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추진을 주창하고 나섰다. 원래 FTAAP은 부시 대통령이 2005년 동아시아 FTA와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이 결합하는 가운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던진 아이디어이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FTAAP를 TPP로부터 소외를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TPP를 품는 건축물을 구상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 주석은 “현재 어느 특정한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러 협력 이니셔티브들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손열 2016).

끝으로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 2013년 10월 ‘주변 외교공작좌담회’에서 시 주석은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변과 자유무역구 전략을 실시하고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일체화의 신국면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Xinhua 2017). 즉, 일대일로는 AIIB를 활용하는 투자의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FTA를 통한 무역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결국 TPP와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의식한 ‘실크로드 FTA’란 거대 FTA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TPP란 강력한 무기에 맞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양하고 화려한 비전과 제안 이면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걸맞

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RCEP은 주로 관세 자유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구세대형 FTA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추구하는 자유화율 역시 높지 않다. 21세기 무역 현실을 담는 새로운 무역 거버넌스 규범과 규칙 수립과는 거리가 있다. FTAAP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일대일로외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며 무역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월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은 아태 무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수세에 몰렸다.

## V. 트럼프 통상정책과 미중경제관계의 미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아태 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일자리와 산업경쟁력 상실과 관련하여 다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정서에 호소하여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국민 다수는 자국산업(제조업)의 공동화(hollowing out)가 중국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sup>1</sup>. 금융위기의 늪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2010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가 중국의 부와 경제력은 미국에게 위협이라고 보았다(Freeman 2013, 187). 최근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그림 5], [그림 6] 참조). 2005년 비호감도가 35%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55%로 상승하였고 이런 경향은 주로 공화당과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 역시 공화당과 백인 중장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통상정책과 중국 때리기를 정치적 이슈로 하여 공화당 지지자, 백인 중장년층, 그리고 중서부의 쇠락하는 지역, 즉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지지를 획득한 것은 이러한 미국 사회 저류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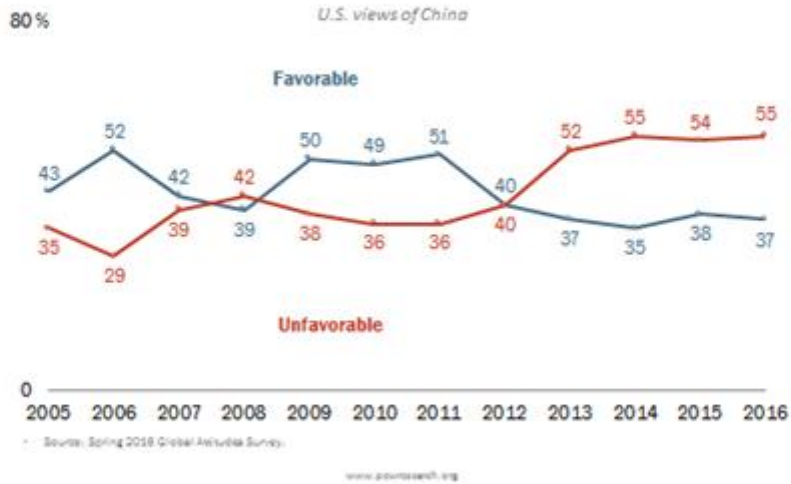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첨단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온 반면,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비스 부문의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교육, 저소득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희생시키는 핵심수단으로 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3월 발표된 미무역대표부(USTR)의 “2017년 무역 어젠다”(2017 Presidential Trade Agenda)는 미국우선(America First)이란 기본 원칙 하에서 (1)무역정책에서 국가주권의 수호, (2)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적용, (3)모든 가용 수단(레버리지)을 동원한 해외시장 개방, (4)새롭고 더 낫은 무역협정의 체결이란 네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다자규범 보다는 경제민족주의에 근거한 관리무역(managed trade)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

1 반면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경제로 고착시키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 경제를 최종 가공생산에 머물게 함으로써 실제 고부가가치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취하는 구조를 영속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점유할 수 있도록 산업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림 4] 미국의 대중인식, 2005-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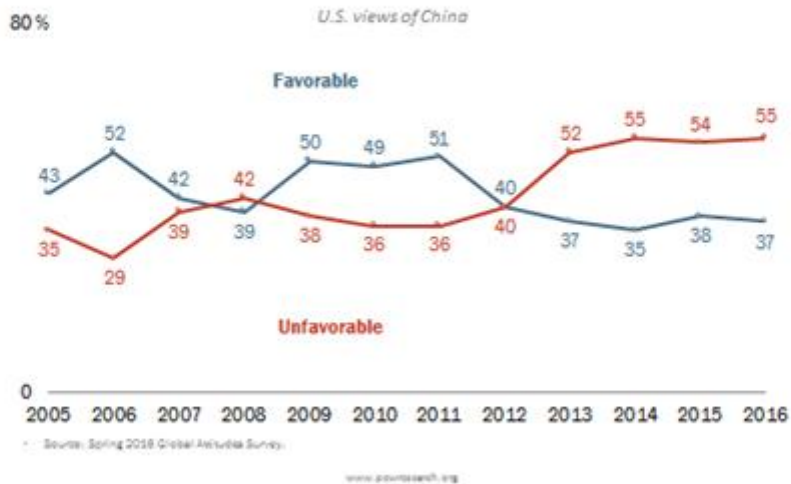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속 & 확대



출처: Pew Resear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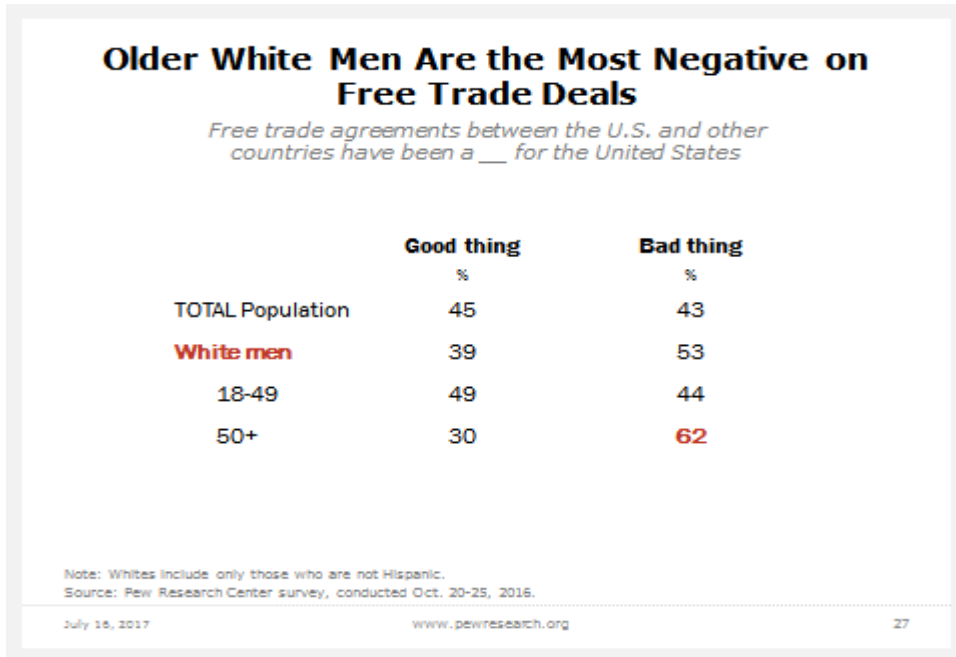
[그림 5] 미국의 대중인식, 정당과 연령대 (단위: %)

##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속 & 확대



출처: Pew Research (2016)

[그림 6] 미국인의 무역인식 (단위: %)



출처: Pew Research (2016)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게 무역수지 교정을 향한 강력한 압박을 공언해 왔으며, 여기서 우선적이고도 궁극적인 공략대상은 중국이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조작과 함께 국영기업 보조금, 중국시장의 방어벽, 노동기준, 환경 규제 미약, 기술 규제 등을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막대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피해가 야기되므로 통상법을 발동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경상수지 적자 교정의 차원이 아니라 자국의 탈산업화를 촉진하여 경제력을 약화시킨다는 국익 차원의 대응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중국에게 대한 패권적 지위의 약화를 저지하려는 전략적 고려를 담고 있다. 중국의 무역정책이 적대적이고 위협이라는 인식은 백악관 산하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mmission) 나바로 위원장이 무역정책의 목표로 (1) 무역의 재균형(즉, 무역역조 해소), (2) 제조업 부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미국의 종합 국력(America'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회복을 꼽은 데에 잘 드러난다.

아태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미국우선주의와 양자주의(b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 양자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우선 무역협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로서, TPP 탈퇴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주요국과 양자협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한미 FTA 재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재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태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 혹은 생산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메가 FTA 혹은 다자 FTA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 당장 한

국과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일련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TPP 탈퇴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공공연한 경제민족주의적 언사는 한일 양국이 동조하는 미국주도 아키텍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중국에 리더십 획득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문제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대응이다. 유사하게도 1980년대와 90년대 초 일본은 미국의 불공정 무역 공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여러 양보를 거듭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이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비대칭적 구조 조건이 존재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양보를 고려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 또한 미국의 주장에는 경제논리상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어 국제 여론전 역시 만만치 않다. 예컨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처럼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 또한 러스트벨트 제조업 쇠퇴는 무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국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통상압력 논리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끝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란 다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주의적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16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보호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서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구경제는 각국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국가 간 자본, 기술, 상품, 산업, 사람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바닷물을 호수나 강으로 역류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현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 폭풍우와 마주칠 때 항구로 퇴각하면 결코 바다의 저편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지구적 연결성(connectivity)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배가하여 상호 연결된 성장과 번영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과 투자를 발전시키고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며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보호주의 추구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폭풍우는 피할 수는 있지만 빛과 공기도 차단됩니다(Xi 2017).

그는 이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서 ‘지구화 2.0’(Globalization 2.0)을 선언하고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 반대에 앞장섬으로써 미국의 공세에 굴하여 당장 타협에 나서기보다는 명분론을 배경으로 장기적 경쟁 전략에 나섰다 볼 수 있다.

이렇듯 명분전을 펼치는 중국에 미국이 무차별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고, 중국 역시 여러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반발에 한계가 있다. 양국은 전면적 무역전쟁은 아니더라도 불공정 무역을 둘러싼 공방과 한정된 보복의 행사 등으로 제한된 갈등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난 20여 년간 미중 통상관계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화의 기수를 자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비스, 상품, 투자,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중국이 전면적 개방·개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역내 개방무역질서와 경제통합을 주도할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저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RCEP은 설사 성사되더라도 지역무역질서를 주도하고

통합력을 제고하는 기제가 되기는 어렵다. 실제 중국의 경우 국제다자규범의 준수보다는 위반의 사례가 빈번하다. 겉으로는 세계화를 천명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어기면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지속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렇듯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중국이 정당한 지역경제질서를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은 결국 아태 질서의 공백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의 지위 상승이다. 호주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TPP 11(또는 TPP minus USA)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에 중추적 행위자(pivotal player)는 일본이다. 현재 11개 회원국 중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동력을 받을 수 있으나, 과연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다자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지, 미일 FTA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흥미로운 관찰거리라 할 수 있다.

## VI.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향후 10-15년간 미중 간 경제역전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안보딜레마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양자 간 경제적 경쟁, 경제질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여 기존 경제질서의 비정당성을 부각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미국에 적극적으로 경합하고 있다. 향후 양국 간 무역갈등으로 미국의 수입 제한조치가 강화되고 중국이 맞대응으로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수출한 중간재를 조립, 가공하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본격적 보복이 실행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아태 지역의 자유주의적 통상질서 재건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야 한다. 현재 미중 양국이 이를 담당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조건하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TPP 이후(post-TPP) 통상질서 건축을 위해 RCEP, 한중일 FTA, FTAAP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 FTA 교섭 재개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post-TPP 지역질서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강대국을 구속하고 힘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즉 강대국이 시장개방 기초를 유지하면서 비대칭적 권력을 사용하여 상대국을 압박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무역질서를 설계해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대국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다자주의로의 회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양자주의와 공격적 일방주의에 경도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아태지역에서 지도력은 쇠퇴할 것이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역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할 것인가가 될 것이며, 아시아 다자 네트워크의 진전 정도에 따라 미국은 아태 다자무역질서 제도화(TPP 등)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회귀할 수 있다. 한국의 로드맵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손열. 2016. “TPP의 국제정치경제: 무역질서 건축 경쟁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56 (1): 143-173.
- 양평섭 외.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16 (34).
- LG 경제연구원. 2017. “한미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http://www.amchamkorea.org/bbs/board.php?bo\\_table=resources&wr\\_id=64](http://www.amchamkorea.org/bbs/board.php?bo_table=resources&wr_id=64) (검색일: 2017. 8. 3)
- 이승주. 2013. “미중일 삼각구도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학> 36 (2): 93-122
- 이승주 2015 “중국의 부상과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양자, 지역, 다자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 (2): 1-29.
- Christensen, Thomas. 2015. *The China Challenge: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Power*. New York,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 Freeman III. Charles W. 2013. “The Commercial and Economic Relationship.” In *Tangled Titans*. edited by David Shambaugh. 181-209.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 Gilpin, Robert. 1983.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h, Evelyn. 2013. *The Struggle for Order: Hegemony, Hierarchy, and Transition in post-Cold War 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lbert O. 1945.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5*.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Kennedy, Paul. 1988.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London: Unwin Hyman.
-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Lebow, Richard N. ed. 2015. *A cul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delski,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2): 214-235.
- Organski, Abramo 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w Research. 2016. “Global Attitudes Survey.” <http://www.pewglobal.org/category/publications/2016/> (검색일: 2017. 8. 3)

Ruggie, John Gerard.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2): 379-41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5.

Yuan, Wen Jin. 2012.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China's Corresponding Strategies. - A Freeman Briefing Report." [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620\\_Freeman\\_Brief.pdf](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620_Freeman_Brief.pdf) (검색일: 2017. 8. 3)

Xi, Jinping. 2017. "Full Text: Xi Jinping's Keynote Speech at the World Economic Forum." Remarks at the World Economic Forum. January 17. Davos, Switzerland.

[http://www.china.org.cn/node\\_7247529/content\\_40569136.htm](http://www.china.org.cn/node_7247529/content_40569136.htm) (검색일: 2017. 8. 3)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Trade recovery expected in 2017 and 2018, amid policy uncertainty."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17\\_e/pr791\\_e.htm](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17_e/pr791_e.htm) (검색일: 2017. 8. 3)

##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과 지구넷 21 회장, 연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과 국제학 연구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정치경제, 통상정책의 정치경제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Making of a Regional Trade Architecture," "The Abe Effect on South Korea's Trade Policy," "Regionalization, Regionalism and the Double-Edged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 위원장 : 하영선 EAI이사장)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기획실 나지원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iwonra@eai.or.kr](mailto:jiwonra@eai.or.kr)

